

갈등관리와 시민사회의 몫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

I. 들어가며

참여정부 들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회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의견을 주고받고 각종 갈등관리 시스템과 관련 법안을 만들어 사회 각계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갈등의 저변에는 '불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건전한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인내나 서로 배려하고 다독이는 아름다움이 사라져, 그 결과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라도 걸려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아치저녁 미디어 대응하듯, 정부가 일일이 나서서 통합과 조화와 단결을 일구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두면 저절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문제도 있다.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초인이나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무언가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기필코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술래의식'에 함몰되어 있는 듯도 보인다. 이번 판이 안 되겠으면 포기하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 짐착과 아집은 자멸이요 파장엔 공멸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는 남는다. 그러기에 여러 갈등관리 방안들이 제시된다. 일례로, 갈등관리를 위해 정부는 갈등관리기구의 운영 활성화와 시민참여 제고, 갈등관련 정보공유와 홍보, 정책 수용도 제고, 간접적 보상·지원체계 의 구축, 시의적절한 대처, 잠재적 갈등요인의 탐지와 초기 대응, 갈등관리 대응기법의 개발과 사후 이행력 담보, 갈등관리의 대상집단과 사안의 본질 명확화, 갈등학습 노력과 갈등에 대한 긍정적 사고, 공무원의 자세와 문화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강화 같은 것들이 강조되기도 한다(서영복, 2003).

대체로 갈등의 완벽한 해결과 해소보다는 관리의 차원이 부각된다. 최근에는 갈등의 전환이라는 의미로도 조명된다. 또, 이익당사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의 몫

보다는 중재자로서의 시민단체의 몫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민단체는 갈등관리에서 절대적 선인지, 시민단체의 한계는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여러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지역의 사례소개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II. 시민사회(단체)의 몫

1. 책임성 있는 사전문제 제기와 대안제시 역량 강화

정부 의사결정 절차의 실질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는 좀더 정부가 하는 일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다. 갈등요인의 상당부분이 주민의사의 사전수렴이 충분치 못한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안 방폐장 문제가 그 비근한 예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비밀주의적 의사결정이나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경계하고 행정절차법 준수, 정보공개, 엄격하고 객관적인 각종 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에 주목했으면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동향도 평소에 잘 지켜보고, 책임성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초기단계부터 역량을 집중하고, 상황변화에 맞게 구체적인 타협안도 제시했으면 한다.

2. 갈등관리를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

불법집회나 시위부터 하고 보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분담 않고 제몫 지키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갈등 당사자 간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갈등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문제는 생존적 차원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문화적 지향과도 연관되는 것들이다. 상충되는 전략적 가치 간 조화 노력도 요구된다. 관련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는 '협동학습'의 기회는 더더욱 적다. 표피적인 감성적 문화코드 과잉을 이성적 문화코드로 대체하는 일이 날로 중대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책임전가, 타협거부, 오기 싸움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도 절실하다. 공동체문화 발양도 숙제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도 아쉽다. 지방자치의 활

성화, 갈등관련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갈등관리를 위한 시민사회의 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모두들 진력해야 하고, 정부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시민사회는 특히 획일주의, 흑백논리, 동조압력을 뿌리치는 용기도 대의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자세를 새겨야 한다.

3.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강화

시민단체는 열린 마음으로 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와도 자주 만나고 대화로써 감정적 대치 가능성을 미연에 줄여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호신뢰와 정보 공유 그리고 타협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식사회 내 단계와 절차도 될 수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치지향과 처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음도 인정하고 역지사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라는 갈등환경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갈등관리방식, 경제적 유인책의 정도, 주민참여 수준에 따라 갈등해결의 가능성과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하혜영, 2007). 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임재영, 2007).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조력자로 개입하면 분쟁기간이 줄어들고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평균 1년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갖추 조력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갈등 중재 조정 노력이 아직 매우 미흡하다. 오히려 분쟁 제기자와 갈등의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개입, 그리고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개입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중재자·조정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도 스스로 힘써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보교류와 교육훈련의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 각급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각종 옴부즈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도, 갈등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4. 갈등관련 갈등소지 법제 개선 노력

갈등 사전예방활동의 하나로 모호하거나 복잡한 갈등유발 법제 개선에 시민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제 자체가 갈등 초래요인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갈등관련 법제개선 대상의 예로는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 주민투표법 · 각종 환경관련법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소지 법제개선 대상의 성격유형으로는 추상성, 모호성, 논란 가능성, 부패 야기, 관련 규정의 개별법령 산재, 상식에 어긋나거나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또, 현행 정부조직의 업무분장이 너무 막연해서 정부조직 내 역할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사실도 새삼 유념했으면 한다. 쉬운 일이 아니나, 정부는 광범위하고도 정치한 직무분석 작업과 함께 각 직책별 업무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나가는 일에 착수했으면 한다. 시민사회도 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5. 입법 · 사법 · 행정 공무원의 인사혁신 모니터링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당사자이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갈등관리 대부분의 짐을 떠안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입법부가 갈등관리에 취약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입법부가 정부의 갈등관리에 적극 도움을 주기는커녕, 선거를 의식하여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심의조차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회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경우, 선거구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래도 정부는 국회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나갔으면 한다. 사법부와 언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시스템을 갖췄다 한들, 정부의 구성원들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합리적인 정책조정과 갈등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충원경로의 다양화에서부터 부처 간 민관 간 인사교류, 보직관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공직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사회적 다원화 속 갈등조정 관리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에 기초를 두어야 할 갈등관리가 특정 시각이나 지적 바탕에 얽매어 사태를 그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적재적소 배치로 역할기대와 지위 불일치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 국민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갈등소지를 줄이는 방편이다. 갈등관리 관련 능

력과 경력을 공무원 인사고과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당장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갈등요소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개선방안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갈등관리 매뉴얼, 워크북 작성과 활용-사후 이행력 담보

정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의 합법성, 평등성, 신뢰성, 공정성, 효율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개개 갈등사안들을 매뉴얼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뉴얼 규정내용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예방, 갈등 유형별 당사자별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매뉴얼 위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그리고 갈등해결이 가능해야 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숙제도 따른다.

특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가치갈등에 관한 워크북 만드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통일지향, 합법성의 기준, 규제냐 자율이나, 실제 정책결정, 과정, 가치기준 등 분쟁 과정에서의 상황맥락, 인식의 합의 기준, 쌍방 간 합의, 어떤 것이 희생되고 채택 적용됐는지 사례범주별 유형화를 통째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 공동인식 할 수 있는 준거 틀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갈등의 센서 기능을 해왔으니, 이에 동참하면서 무조건 편 가르기 풍조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투자이다. 합리적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자세와 경험을 모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니셔티브보다는 동참하는 자세부터가 스스로 어거지 쓰는 트리플 메이커가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7. 갈등관리의 합리적 기준과 잣대 마련, 다양성 강화

시민사회는 도덕적 자산을 가지고 상호인정하면서 여론의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갈등관리에 개입한다는 점,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 등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그

역할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야할 것이다. 이제는 시민단체가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전설이 되어야 할 때다.

특히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인간의 지식, 경험, 지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겸허한 노력의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합리적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기검증부터 해나가야 한다. 삶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갈등관리, 조정을 해나가는 무기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긍정적 자신감, 도덕적·과학적·사회적 정의와 형평의 근사치에 다가갈 수 있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여겨진다. 갈등관리 관련 조직, 기구와의 네트워크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허위, 과대포장, 과다대표의 문제, 끼리끼리 의식도 바뀌어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자체의 정보 공유와 학습, 실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간 갈등관리에 관해 사회학적·환경문제 위주의 접근이 다수였다. 지식과 정보의 활용 관련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차분하게 자원 총조사도 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구축, 교육 사업 실시 등에 힘써야 한다. 특히 관련 학회나 연구자 집단, 시민단체는 사례의 단순한 소개보다는 갈등의 구조요인, 갈등야기, 갈등당사자, 갈등조정자, 연구자, 갈등관련 정부의 시스템 안팎 갈등 논의의 내막에 대해 더 치밀하게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지역의 갈등관리 사례와 시사점

1. 한탄강댐 건설관련 갈등과 철원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역할

(1) 한탄강댐 갈등 일지

- 19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용 댐 건설 추진 결정
- 2001년 1월 28일 철원군의회 ‘한탄강댐 설치반대 건의안’ 상정
- 2002년 8월 20일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2003년 9월 3일 한탄강댐백지화를 위한 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 한탄강 댐 건설 사업 관련 국민감사 청구
- 2003년 10월 23일 국민감사 청구 기각
- 2003년 12월 19일 대통령의 강원도민과의 대화
- 2004년 2월 지속가능발전위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 활동
-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중재결정 확정·발표
- 2005년 5월 23일 감사원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국회에 보고
- 2005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2006년 8월 22일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 한탄강유역에 홍수조절용 댐 건설 결정 발표
- 환경운동연합과 철원군의회 한탄강댐 백지화 성명서 발표
- 파주,포천,연천, 경기도 한탄강댐 조기 건설 촉구 성명 발표
-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원회 단식농성 등 반대투쟁 선언
- 2006년 12월 건교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7천만m³의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 고시
- 2006년 3월 9일 한탄강 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구선호)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 제기
- 소송취지: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한탄강 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시공업자를 선정해 실시설계를 시행하였다. 이는 법적 절차상 잘못됐고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
- 2007년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소송 1차 공판 실시
- 2007년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공동위원장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한탄강 시민답사, 행정소송지원, 한탄강협곡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선언

- 2007년 7월 30일 강원시 시·군의장협의회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탄원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
- 2007년 8월 13일 파주시 의회 한탄강댐 건설 촉구 탄원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2007. 8.13)

(2) 철원 행정개혁시민연합의 관련 활동

-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원회 활동 전개
- 2007년 1월 30일 '한탄강의 앞날을 진단합니다' 토론회 개최
- 한탄강댐 관련 행정소송 취하 여부, 공동투쟁위의 투쟁 방향, 철원군 현안.숙원사업 협의 추진위원단 구성 여부, 홍수조절용댐 건설과 숙원사업 해결을 수용하는 건교부장관, 철원군수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대한 논의
- 2007년 2월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과 조건부 수용을 놓고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55.7%가 조건부 수용을 지지했다며, 승산없는 백지화 투쟁보다는 지역현안과 맞바꾸는 '빅딜' 주장
- 2007년 3월 철원군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 참여 촉구
- 댐건설시 예상되는 피해방지대책은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댐건설 추진 주체인 정부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한여울협의회 참여는 철원군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회단체들과 협의해 협의회 가입 절차를 밟겠다고 철원군과 군의회에 통보
- 2007년 8월 9일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활동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 실시

(3) 시사점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간의 8년간의 갈등은 정부의 홍수조절용댐 건설 결정으로 일단 해소되었다 생각했으나 갈등의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결과 갈등은 극대화되었고, 지역의 공동체 파괴는 더욱 심화되었다. 어찌 보면 이는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다. 더군다나 사업시행의 판단을 법원의 결정

에 맡겨 놓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판결의 결과를 승복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이후의 투쟁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그간 정부와 반대측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간의 골 깊은 불신에서 기인한다. 또, 각 지역의 입장차와 보상방안을 정확히 조사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철원 행개련은 초기에 공동대책위와 투쟁위 활동에 참여하며 한탄강댐 건설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조정 노력 후 결정된 계획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관련 토론회와 지역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현안 타결과 맞바꾸는 조건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또, 투쟁위 활동의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쟁위에서 탈퇴하고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의 채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철원군과 의회에 관련 활동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과정상에서 지역주민들과 투쟁위측의 '지역민 분열조장'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상생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역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각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정당인이거나 특정이익을 반영하는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혈연·지연에 의해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중립적인 위치인지 등을 정확히 표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갈등관리를 행하는 행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드러낸다. 법과 제도, 절차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관계인들의 행태에도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다수의 지역주민이 군사보호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완화를 바라고 있어 철원행개련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이를 협상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후 각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는 겹쳐히 결과를 수용하고 이후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역의 분위기는 입장을 달리하는 각 단체와 주민들이 판결이후 각자의 입장에서 이를 반복할 수 있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다. 이는 대부분 사업시행이 결정된 이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보상액을 늘리기 위해 투쟁의 강도가 강화되었던 많은 갈등의 선례에서도 기인한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용의 정신도 필요하며, 갈등관리의 최종책임은 정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져 나가야 할 것이다.

2. 철원 군부대 관련 문제와 철원행개런 활동

(1) 활동일지와 관련 활동

- 2007년 1월
 - 철원행개런 군부대의 주민동의 없는 사유재산을 훼손행위와 소음 유발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고발조치 계획과 일인릴레이 농성 돌입
 - 육군5군단과 관할 3사단·6사단 작전참모관계자 등 철원행개런 방문. 군부대 입장 설명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민·군 상생협력’ 모색.
 - ‘민·군 공동위원회’ 구성
- 2007년 10월
 - 철원행개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부대 공여지 지역 환원 건의문 발송
 - ‘민·관·군 공동발전위원회(이하 공동발전위)’ 구성
 - 철원행개런 군 도로개방 건의
 - 공동발전위 사문안도로 개통 합의
- 2007년 11월
 - 철원군, 육군 5사단 장흥리 포사격장 이전 계획 발표
 - 철원행개런 장흥리 포사격장 이전 계획 관련 국방부에 예산지원 건의
- 2007년 12월
 - 철원군의회 장흥리 포사격장 이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부결처리
 - 철원행개런 철원군과 의회 방문 협조 요청

(2) 시사점

접경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철원주민들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수십년 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원행개런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결과 민원해소를 위해 장흥리 포사격장 이전문제, 군부대 공여지 지역환원 문제, 사문안 도로 개통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관련 활동을 하며 초기에는 '민·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과 지역주민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고 이후 '민·관·군 공동발전위원회'로 발전하여 정부와의 대화 통로도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군, 지자체등이 사전에 협의하는 바람직한 사례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의 중재자적 역할과 정치적 타협이 조화를 이루어낸 사례로 보여 진다.

참 고 자 료

- 서영복. (2003). 갈등관리를 위한 스무가지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11/12월호.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 하. 서울: 논형
- 박수선. (2006). 한탄강댐 건설. 박진·채종현 편저.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서울: 굿인포메이션.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지방자치단체 소지역 갈등관리 워크숍 자료집.
-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 공저.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행정DB센터
- 박태순. (2006). 지자체 갈등의 유형과 특징.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발전> 8월호
- 하혜영. (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임재형. (2007)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분석.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1.23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 철원행개런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료와 성명서
- 기타 신문검색 자료
- 사회갈등연구소. (2007). 갈등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7.9.